

코로나19 첫 손실보상 체크 포인트는

# 2019년 대비 손실액 산정 방역조치이행 기간 확인

(2021년)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지급 분기당 상한 1억, 하한 10만원 방역조치 위반 적발시 불이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해서 지급한다.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손실보상 관련 공문을 정리해봤다.

우선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당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오락실, 독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희·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골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을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타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미·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실 및 스타디카페 등은 영업시간제한이, 유희·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기업은 연 매출액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매출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관심은 손실보상금 산정과 보상

수준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을 우선 산정한 뒤 여기에 '방역조치이행일수'를 곱하고, 다시 '보정률'(80%)을 곱해 산출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해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한다. 다시 여기에 2019년의 영업이익률과 같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최종적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도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이행일수는 해당 기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업종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율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이행일수가 28일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받는 손실보상금 수준은 392만원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상한액(분기당)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소

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후라면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이달 27일부터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11월3일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을 받고 난 후 이의신청도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인 관할 시·군·구청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은 소상공인 등의 문의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상담인력을 최대 1000명까지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정부, 규제 컨트롤타워 일원화 검토해야”

혁신벤처단체協, 김부겸 총리 면담

현장 애로사항 전하고 제도개선 논의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함께 노력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두루 전달했다.

13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단체)에 따르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혁신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들을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제2의 벤처붐이라는 최근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선 규제샌드박스, 연대보증 폐지 등 혁신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재기 지원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가속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컨트롤타워 일원화 등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한국에서 유니콘기업 갈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부겸 총리,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은 스케일업 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컨더리 시장 지원 및 스타트업 M&A 시장 촉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스톡옵션 세제 혜택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미래의

세계경제는 기술창업이 주도하게 된다"면서 "연간 2000개씩, 2030년까지 총 2만개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그 가운데 1000개의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를 주도할 1등 기술창업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간 2000개 이상의 기술창업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창업·투자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니콘 기업 탄생을 돕는 교육체계 구축 ▲팁스(TIPS) 확대 ▲기술창업기업 생존력 강화를 위한 엔젤투자 세제 개편 ▲지역간 기술창업·투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엔젤투자허브 전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 창업진흥원, 반부패·청렴경영 나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 개최

창업진흥원이 반부패·청렴 경영에 나섰다.

창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대표가 참석한 선언식에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서약을 하는 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 여기엔 직무상 비밀 또

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문 원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반부패·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전문지원 기관인만큼 임직원 모두가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창업지원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기정원, 中企 기술인재 채용 지원

사람인 채용시스템 내 전용공간 마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TIPA는 채용 포털 사람인 채용시스템 내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인재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개발(R&D) 및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기술인재 채용관에 가입·입점한 중

소기업은 기술인재 채용 공고를 사람인 홈페이지 첫 화면 '기술인재 채용관'에 상시 노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건수에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채용공고를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채용 지원자의 적합성을 선별해 주는 유료서비스인 'MUST'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원하는 입사 지원자가 없더라도 전체 구직자 중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주는 '인재 Pool'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외교부, '대장동 키맨' 남욱에 여권반납 명령
- ▲ 위드코로나 전환 앞두고 '8인모임·자정영업 검토'



- ▲ 내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육군총장,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여부 '검토중'



- ▲ 어린이 통학차량, 2035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
- ▲ 서울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택시 운행 실태조사